

2019년도 생통강좌

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

2019년 9월 27일 ~ 10월 16일 매주 수, 금요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문화탐방 ---- 고흥 문화탐방
--	--

-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관 : 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 (사)대동문화재단,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극단연인, (사)광주마당,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오월어머니집, 광주장애인미술협회, 광주영상위원회
- 후원 : 광주광역시

■ 프로그램

구분	일시	주제	강사진
문화 강좌	9.27(금) 15:00	청년과 문화도시 광주	문 정 은 (광주청년센터the숲 센터장)
	10.2(수) 15:00	장애인과 문화도시 광주	정 진 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10.4(금) 15:00	오월여성과 문화도시 광주	정 현 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10. 11(금) 15:00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	신 경 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10. 16(수) 15:00	성소수자와 문화도시 광주	백 희 정 (광주나비 대표)
답사	10. 18(금) 08:00	고흥 문화탐방	

■ 목 차

1. 제1강좌	청년과 문화도시 광주 -----	07
2. 제2강좌	장애인과 문화도시 광주 -----	29
3. 제3강좌	오월여성과 문화도시 광주 -----	37
4. 제4강좌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 -----	55
5. 제5강좌	성소수자와 문화도시 광주 -----	61

제1강좌

청년과 문화도시 광주

문 정 은

(광주청년센터the숲 센터장)

문화도시 광주

(2015)와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2017)를 통해 본 문화도시 광주의 청년의 삶

정 은(광주청년센터the숲 센터장)

1.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본 광주지역 청년 문화 현황

. 문화 공간

1)

광주의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 17개소, 등록박물관 10개소, 등록미술관 7개소, 문예회관 7개소, 지방문화원 5개소, 문화의 집은 4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50개소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시설이 12개소, 교육청 시설의 5개소가 있으며, 등록박물관은 국공립 시설이 5개소, 사립 시설이 2개소, 대학 시설이 3개소다. 구별로는 북구가 15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구(14개소), 서구(8개소), 남구(7개소), 광산구(6개소) 순이다. 북구는 등록박물관과 문화의 집이 각각 6개소, 3개소로 다른 구에 비해 많으며, 동구는 공공도서관이 4개소, 등록미술관이 6개소로 두 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 많다.

< 1> 광주 문화시설 현황(2013년 기준)

(단위: 개소)

구	합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광주	50		17	12	5		10	5	2	3	7	1	5	1	7	5	4
동구	14		4	2	2		2		1	1	6		5	1	1	1	
서구	8		3	2	1		1	1							2	1	1
북구	15		3	3			6	3	1	2	1	1			1	1	3
광산구	6		4	3	1										1	1	
남구	7		3	2	1		1	1							2	1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보고서, 2014.

우리나라의 인구 백 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평균 46.44개다. 17개 시도에서 인구대비 문화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로 208.82개다. 이어 강원(118개), 전남(90.71개), 충북(75.66개)이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34.58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광주가 33.95개로 두 번째다. 광주의 인구 대비 문화시설은 공공도서관이 11.54개로 가장 많으며, 문화의 집이 2.72개로 가장 적다.

< 2> 인구 백 만 명당 문화시설 수(2013년 기준) (단위: 명, 개소)

	인구 수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총계	51,141,463	46.44	16.91	14.74	3.72	4.30	4.48	2.27
서울	10,143,645	31.94	12.13	11.44	3.45	1.58	2.46	0.79
부산	3,527,635	22.11	8.79	4.54	1.42	3.12	3.97	0.28
대구	2,501,588	25.58	11.19	5.60	1.20	4.40	3.20	-
인천	2,879,782	28.47	13.54	7.99	1.39	2.78	2.78	-
광주	1,472,910	33.95	11.54	6.79	4.75	4.75	3.39	2.72
대전	1,532,811	34.58	15.01	9.13	3.26	1.96	3.26	1.96
울산	1,156,480	30.26	11.24	7.78	-	3.46	4.32	3.46
세종	122,153	65.49	8.19	40.93	-	8.19	8.19	-
경기	12,234,630	36.13	15.86	10.70	3.43	2.62	2.53	0.90
강원	1,542,263	118.00	30.47	49.28	7.78	1.23	11.70	6.48
충북	1,572,732	75.66	24.16	26.07	4.45	8.27	7.63	5.09
충남	2,047,631	71.79	26.86	21.49	3.91	8.30	7.81	3.42
전북	1,872,965	71.54	28.30	18.15	3.74	8.01	7.47	5.87
전남	1,907,172	90.71	31.46	24.64	9.96	9.44	11.54	3.67
경북	2,699,440	68.16	23.34	21.11	3.33	8.89	8.52	2.96
경남	3,333,820	52.79	17.70	16.20	2.40	5.70	6.00	4.80
제주	593,806	208.82	35.37	10.61	30.31	3.37	3.37	30.31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보고서, 2014.

2)

2013년 기준 광주의 공공체육시설(설치유형별)은 모두 432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단지에 가장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이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127개소로 가장 많다. 도시공원에는 70개소, 마을공터에는 54개소, 등산로에는 3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북구가 163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남구(89개소), 동구(72개소), 서구(68개소), 광산구(40개소) 순이다.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총 548,088㎡며, 이 중 광산구가 305,106㎡로 가장 넓고, 남구는 19,736㎡로 가장 좁다.

< 3> 설치유형별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기준) (: 개소, m²)

	계	체육공원	둔치	마을공터	아파트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시설 조성면적
계	432	6	12	54	127	2	38	70	123	548,088
동구	72	1	1	14	11	1	18	2	24	64,196
서구	68	1	6	6	5	0	9	25	16	50,926
남구	89	0	0	3	48	0	3	12	23	19,736
북구	163	3	1	14	61	1	4	23	56	108,124
광산구	40	1	4	17	2	0	4	8	4	305,1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보고서, 2014.

광주 공공체육시설을 시설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358면의 간이운동시설과 2,510점의 체력단련시설, 2,088점의 부대편익시설이 있다.

<표4> 시설내역별 공공체육시설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면, 점)

지역	간이운동시설										체력 단련 시설	부대 편익 시설
	계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씨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운동광장	배드민턴장	기타		
계	358	13	10	29	2	20	55	1	36	192	2,510	2,088
동구	20	1	1	4	1	2	6		4	1	373	367
서구	47	3	2	2		1	7		1	31	420	306
남구	90		2	7			4		17	60	530	288
북구	123	4		8		3	22	1	5	80	814	712
광산구	78	5	5	8	1	14	16		9	20	373	4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보고서, 2014. 재구성.

· 문화예산

2013년 광주의 각 구별 문화예산 평균은 216.66억 원이었다. 또한 문화예술예산은 평균 161.67억 원이었으며, 공연예술예산은 19.43억 원이었다. 광주의 문화예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239.53억 원 보다 약 22억 원 적었다. 또한 공연예술예산은 19.43억 원으로 전국 평균(32.14억 원)보다 12.71억 원 더 적었다. 반면 문화예술 예산은 전국 평균인 105.97억 원보다 55.7억 많은 161.67억 원이었다.

< 5> 문화예산 현황(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예산구분	금액	지역	예산구분	금액
전체	문화예산	23,953	광주	문화예산	21,666
	문화예술예산	10,597		문화예술예산	16,167
	공연예술예산	3,214		공연예술예산	1,9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2013.

· 문화공연

1)

2013년 한 해 전라남.북도에서 가장 많은 공연을 한 장르는 서양음악이었다. 서양음악은 전체의 27%인 1,139건의 공연을 했다. 다음으로 복합공연이 985건(23.6%)이었으며, 국악 837건(20%), 연극 656건(15.7%) 순이었다. 오페라와 발레는 각각 31건, 23건의 공연을 했으며, 장르 중 가장 적었다.

연극은 공연건수가 4번째로 많았지만 공연일수는 2,425일로 전체의 40.3%였다. 2,425일간 3,305회의 공연을 했다. 다음으로 공연일수가 많은 것은 복합공연이었는데, 1,121일간 1,512회였다. 서양음악은 1,114일 동안 1,259회의 공연을 했으며 뮤지컬은 584일간 954회였다.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공연은 공연일수와 공연 횟수가 많았던 연극이었으며(약 51만 명), 공연일수와 공연 횟수 차례대로 복합공연(약 49만 명), 서양음악(약 41만 명), 뮤지컬(약 31만 명) 순이었다.

<표6> 전라남.북도 장르별 공연실적(2013년 기준)

(단위: 건, 일, 회, 명, %)

장르별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 회수	관객 수
전체	4,182	6,020	8,204	2,029,070
연극	656(15.7)	2,425(40.3)	3,305(40.3)	513,032(25.3)
뮤지컬	413(9.9)	584(9.7)	954(11.6)	313,557(15.5)
무용	98(2.3)	129(2.1)	115(1.4)	47,569(2.3)
발레	23(0.5)	34(0.6)	30(0.4)	19,798(1.0)
서양음악	1,139(27.2)	1,114(18.5)	1,259(15.3)	412,194(20.3)
오페라	31(0.7)	88(1.5)	111(1.4)	32,593(1.6)
국악	837(20.0)	525(8.7)	918(11.2)	195,031(9.6)
복합	985(23.6)	1,121(18.6)	1,512(18.4)	495,296(24.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2013.

2) 프로그램 가동률

2013년 기준 전국의 문예회관 공연장 수는 339개다.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은 평균 41.2%였다. 광주의 문예회관 공연장 수는 7개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에서는 5번째로 많다. 공연프로그램의 가동률은 61.4%로 집계됐다. 가동률은 전체 평균에 비해 20.2%p 높았으며,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 7>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2013년 기준)

(단위: 개, %)

	공연장 수	가동률	지역	공연장수	가동률
전체	339	41.2	경기	48	44.1
서울	28	64.9	강원	25	27.8
부산	22	59.2	충북	13	41.6
대구	13	53.2	충남	33	21.1
인천	20	37.5	전북	22	39
광주	7	61.4	전남	27	30
대전	4	65.3	경북	39	29.4
울산	4	61	경남	31	39.5
			제주	3	88.9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실태조사. 2013.

2.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를 통해 본 광주 청년의 문화 .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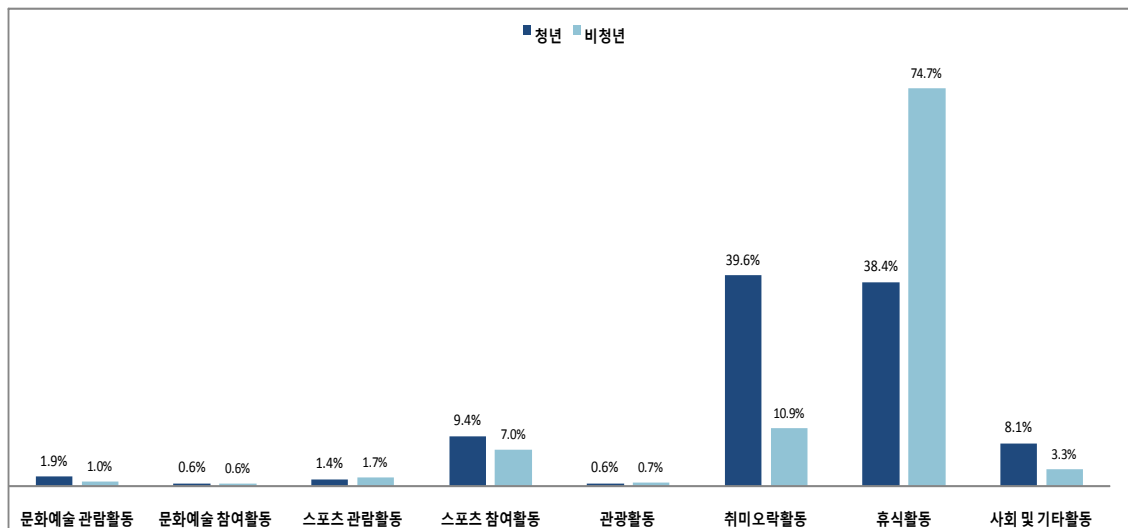
1) 광주지역 청년 문화.여가 실태

□ 청년과 문화

○ ‘청년문화’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함. 70년대의 청년문화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표상이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신세대’로 명명되며 소비 문화의 주축으로 자리 잡음. 하지만 현재는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이라는 현실 앞에서 ‘N포 세대’ 등으로 표상되고 있음.

- 하지만 청년세대는 자발적인 문화예술 관람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다른 세대에 비해서 취미.오락활동¹⁾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음.

[그림1] 주요 여가활동 (1순위): 청년, 비청년



* 원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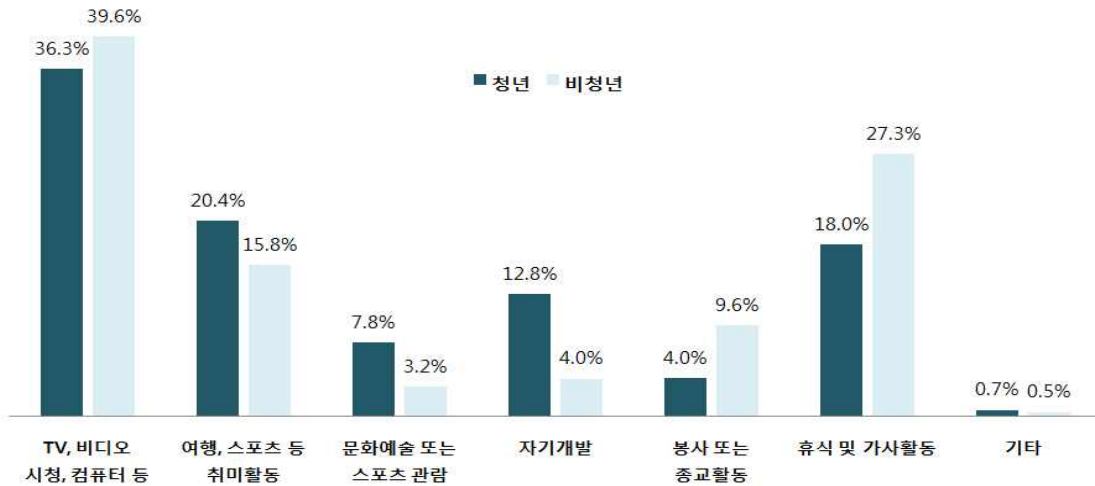
** 청년: 만 19세~만34세 / 비청년: 만 35세 이후

- 청년세대는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의 범위를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일상 속 다양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즉, 청년세대에게 있어서 ‘문화’는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 등산.낚시.게임 및 블로그.쇼핑 및 외식.독서.이용.자기개발 등

□ 광주지역 청년의 문화·여가 실태

[그림2] 광주지역 주된 여가활동 (1순위): 청년, 비청년



* 원자료: 광주광역시사회조사(2015)

** 청년: 만 19세~만34세 / 비청년: 만 35세 이후

○ 광주지역에서도 청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여행, 스포츠 등 취미활동(20.4%)'과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 관람(7.4%)', 그리고 '자기개발(12.8%)' 등의 여가활동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광주종합실태조사(2015)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 청년들은 광주시가 청년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 취업 및 고용(47.1%) 다음으로 문화체육(15.2%)을 꼽았음.
- 즉, 청년들이 광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는 중요한 부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문화·여가 정책은 청년들, 특히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생산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광주지역 문화 인프라

- 광주지역의 문화시설은 총 56개소이며, 공공도서관 21개소, 박물관 10개소, 미술관 9개소, 문예회관 7개소, 문화의 집 4개소로 이루어져 있음.
- 구별로 봤을 때 북구가 17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동구(14개소) > 서구(10개소) > 남구(8개소) > 광산구(7개소) 순임. 북구의 경우 다른 구에 비해 박물관(6개소)이 많으며, 동구는 미술관(7개소)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음.

<표1> 2015년도 광주지역 문화시설 현황 (단위: 개소)

지역	합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립	사립	대학	계	국립	사립	대학			
광주	56		21	15	6		10	5	2	3	9	2	6	1	7	5	4
동구	14		3	2	1		2		1	1	7		6	1	1	1	
서구	10		5	3	2		1	1						2	1	1	
북구	17		4	3	1		6	3	1	2	2	2		1	1	3	
광산구	7		5	4	1									1	1		
남구	8		4	3	1		1	1						2	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인구 백 만 명당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50.36개소이고, 광주는 38.04개임. 서울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많으며, 주요 5대 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많음. 광주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14.26개소로 가장 많고, 문화의 집이 2.72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2> 2015년도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광주 및 주요 지자체 (단위: 개소)

지역	문화시설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광주	38.04	14.26	6.79	6.11	5.43	3.40	2.72
서울	35.52	14.57	11.97	3.69	1.60	2.49	0.80
부산	24.76	10.25	5.41	1.71	3.13	3.98	0.28
대구	28.94	13.26	6.43	1.61	4.42	3.22	-
인천	33.15	15.72	10.25	1.37	2.73	2.73	0.34
대전	36.87	15.80	10.53	3.29	1.98	3.29	1.97
울산	33.23	14.49	7.67	-	4.26	4.26	3.41
전국	50.36	18.98	16.03	1.98	3.40	4.42	2.2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광주지역의 문화예산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지자체 총예산 중 문화 관련 예산 비중은 문화예산 2.09%, 문화예술 예산 1.63%, 공연예술 예산 0.52%로 나타났으며, 세 부문 모두 서울시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 한편 청년사업 중 문화 및 문화예산 활성화 비중은 약 2.33%로 서울에 비해 약 1.81%p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3>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및 재정지원 청년 문화사업 비중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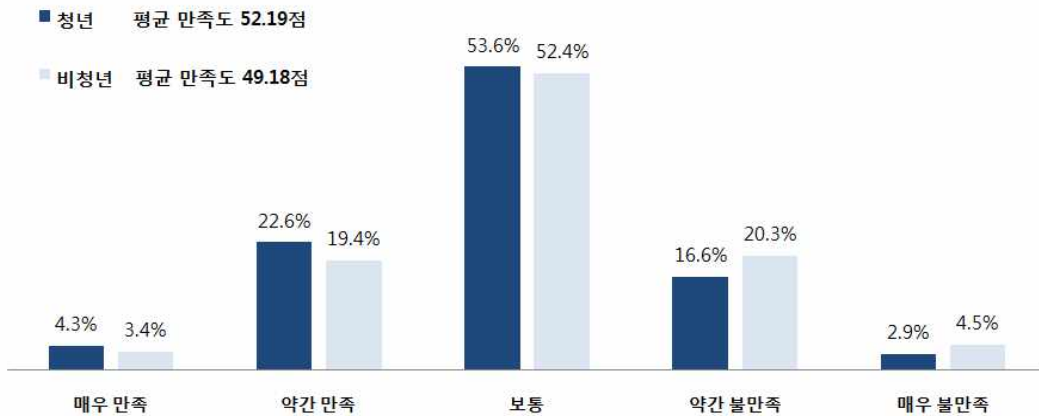
구분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2015년)				재정지원 청년사업 (2016~2017)	
	문화예산	문화예술 예산	공연예술 예산	전체	문화 및 문화 활성화 예산	전체
서울	742,457 (1.97%)	388,431 (1.03%)	114,891 (0.30%)	37,697,143	7,500 (4.14%)	181,233
광주	133,211 (2.09%)	103,943 (1.63%)	33,395 (0.52%)	6,373,604	1315 (2.33%)	56,34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 공연예술실태조사
 각 지방정부 청년정책 추진(시행) 계획(2016-2017) 4개 분야 구분

□ 광주지역 문화.여가 만족도 및 욕구

- 광주지역 청년들의 여가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52.19점으로, 다른 세대(49.18점)에 비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청년 세대의 경우 '경제적 부담(50.2%)'과 '시간 부족(27.8%)'의 비중이 가장 높음. 한편 '여가시설 부족(5.6%)'과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2.7%)'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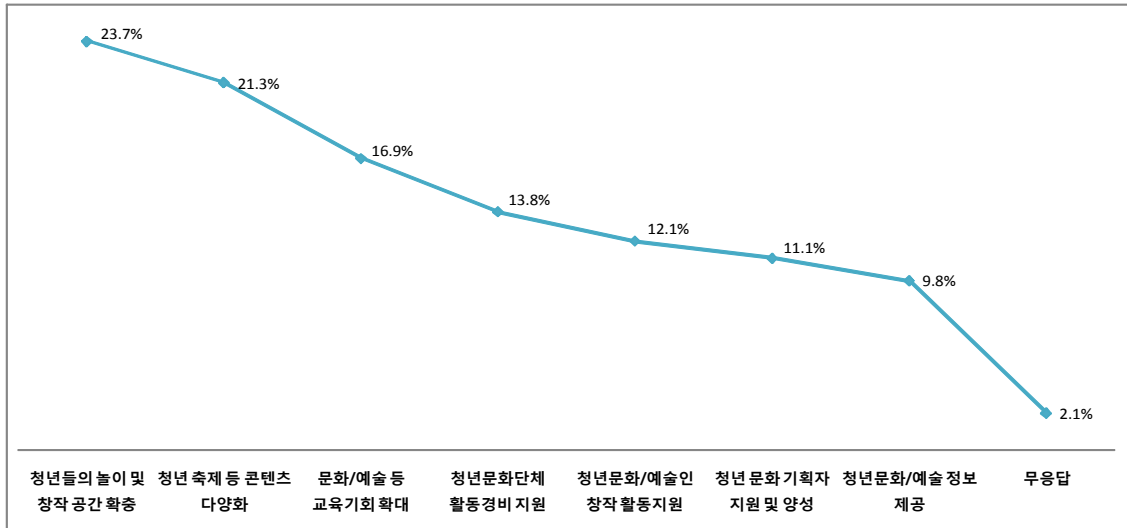
[그림3] 광주지역 여가 만족도: 청년, 비청년



* 원자료: 광주광역시사회조사(2015)
 ** 청년: 만 19세~만34세 / 비청년: 만 35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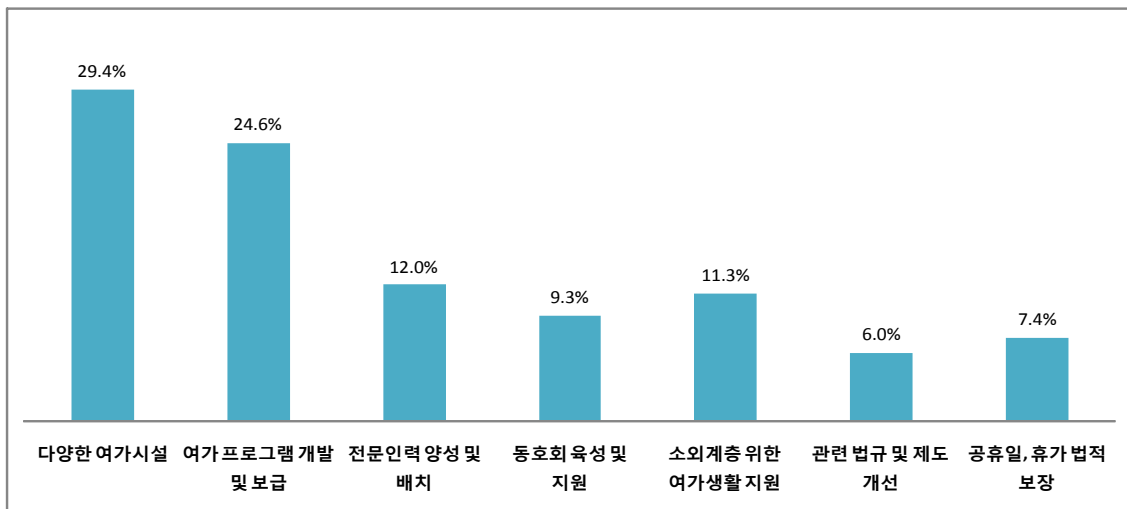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문화 정책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여가시설 확충',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으로 수렴할 수 있음.
- 광주종합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년들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들의 놀이 및 창작 공간 확충(23.7%)'과 '청년축제 등 콘텐츠 다양화(21.3%)', 그리고 '문화/예술 등 교육기회 확대(16.9%)' 등을 꼽았음.
- 한편 국민여가활동조사(2014) 결과, 청년 세대가 문화 정책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한 것은 '다양한 여가시설(29.4%)',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4.6%)',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12%)' 순이었음.

[그림4] 광주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 광주종합실태조사(2015) 자료 재가공

[그림5] 문화 정책 분야 중요도(1순위): 청년



* 원자료: 국민여가활동조사(2014)

2) 광주지역 청년 문화·여가 정책의 내용과 특성

<표4> 광주지역 청년 정책 현황: 기본계획, 시행계획

광주시 기본계획		광주시 시행계획			
범주	세부사업	범주	사업명	대상	
소외계층 위한 여가생활 지원	장애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광주버스킹 운영	청년일반(공모)	
			세계청년축제	청년문화기획자 및 청년문화예술인(공모)	
광주물총축제	청년 일반				
G-POP 페스티벌 개최	청년 일반 (공모) 청년문화예술인				
청년이 만드는 청춘 대학 운영	활동에 소극적인 청년층				
전문인력양성 및 배치	청년 문화예술유통 전문가 육성		전문인력양성 및 배치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청년일반 청년문화예술인(공모)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청년 창의 콘텐츠 개발지원	
	문화창의인재 대학원 협동과정		동호회육성 및 지원 + 다양한 여가시설	청년문화공간 교류 활동 지원	청년 단체
	청년인디문화지원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청년문화예술인	
다양한 여가시설	민자유치 통한 청년공간 조성		문화예술지원체계 개선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청년쿼터제	청년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카페 지원				
	청년문화의 집 확대 운영				
청년생활문화 공공 공간 제공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	문화예술지원사업 청년 쿼터제				

□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문화 역량 제고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주요 목표로, 청년들의 권리 보호라는 커다란 의미 하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에 참여하며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중시하고, 문화적 환경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실천"에 초점을 둠(기본계획, 2016).

○ 기본계획의 세부목표는 ①청년의 다양한 문화향유 보장 ②청년문화 인재 육성 ③ 청년 공간 조성 및 활성화인데, 세부목표별로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님.

- 첫째는 청년의 다양한 문화향유 보장임. 뮤지컬 공연 생중계를 통해 영화 편중 현상을 극복하는 뮤지컬 챔피언스 필드, 청년문화예술인이 수요자 중심으로 버스킹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버스킹', 찾아가는 문화 행사라는 성격을 띠는 컬처트릭 지원, 청년동아리의 발표무대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동아리 페스티벌'로 이루어짐.
- 둘째는 청년문화인재육성임. 문화기획자 체계적 육성 및 문화창의인재 대학원 협동과정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경영인 육성, 문화인재협동협의회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현장수요인재와의 매칭 등으로 구성됨.
- 셋째는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로, 민자유치(KT&G) 통한 청년공간 조성, 청년 문화예술 카페 지원, 청년문화의 집 확대 운영, 청년생활문화 공공 공간 제공 등임.
- 넷째는 취약계층인 청년 장애인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청년 복지 분야), 문화예술지원사업 청년 쿼터제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선진화 등으로, 취약계층 여가 생활 지원 및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의 성격을 지니는 사업임.

○ 기본계획의 성격을 다시 범주화하면 '전문인력양성 및 배치(4개 사업)'과 '다양한 여가시설(4개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개 사업)' > 동호회 육성 및 지원(1개 사업) = 소외계층 위한 여가생활 지원(1개 사업) =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1개 사업)으로 범주화할 수 있음.

- 이는 위에서 확인한 광주지역 및 전국 청년들의 문화정책 수요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사업 비중이라고 판단됨.

□ 광주 청년 문화 지원 사업

○ 시행계획은 크게 △청년문화 향유권 확대 △청년문화 인재양성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나뉨.

- 첫째, 청년문화 향유권 확대는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등 다중집합소에서의 버스킹 상설 운영 및 리그별 경영방식의 문화공연 추진, 청년들의 기획 및 참여를 통해 개최되는 2017 세계청년 축제, 전국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 물총축제, 지역 뮤지션 발굴 오디션 및 공연 형식을 띠는 G-pop 페스티벌 개최 등이 있음.

- 둘째, 청년문화 인재 양성은 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 이론 및 실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멘토링, 문화기획자 대회 등의 '청년문화기획자 육성'이 있으며, 청년들 스스로 지역사회에서의 고충과 발전방법을 모색하고 실현하도록 스스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청년이 만드는 청춘대학',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에서의 청년쿼터제와 콘텐츠 개발계획 공모 심사-실행 지원을 하는 창의콘텐츠 개발 지원 등이 있음.
 - 셋째,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민간 공간을 지정하여 교류 활동을 원하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청년운영 공간 교류 활동 지원이 있음.²⁾ 마지막으로 청년예술인 지원센터는 청년예술인 지원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허브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임.
- 시행계획의 성격을 재분류 하면,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개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동호회 육성 및 지원+공간지원(2개 사업) > 전문인력양성 및 배치(2개 사업) >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선(1개 사업) 순으로 나타났음.
- 기본계획에 비해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분야가 빠지고, 여가시설 제공 사업이 축소되고 동호회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여가프로그램에서 청년문화기획자가 구성하는 축제인 세계청년축제와 광주물총축제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임.
 - 사업 대상은 청년 일반과 청년 문화예술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대부분이 공모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참여공간 및 청년활동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간운영 및 활동 지원과 공간네트워킹투어, 공유회 개최를 실시함.

3)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청년 문화·여가 정책의 내용과 특성

□ 중앙정부 문화 정책

<표5>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와 전략(2016)

목표	전략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1.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
	2. 차세대 핵심 콘텐츠 발굴 지원
	3.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4.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5.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6.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7.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8. 문화가 있는 날 확대
	9. 생활 속 문화 체감
	10.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강화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11.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12.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점 확대
	13.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4개의 정책 목표와 13개 전략을 제시했음. 목표와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양성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양한 여가시설 확충 △동호회 육성 및 지원 △문화 콘텐츠 개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책 내용은 △콘텐츠, 관광 등 창조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체계 선진화 △공공 문화시설에서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 △생활 속 문화 활동 지원 및 참여 기회 확대 (생활 문화센터 확대, 동호회 공연 전시 지원) △자발적 문화 활동 지원(예술강사 파견, 문화가 있는 날 활동 지원 등) △문화콘텐츠 개발 및 한류로 세분화 됨.

□ 주요 지자체 청년문화 정책

<표6> 주요 지자체 문화정책 내용과 대상

목표	전략	주요 대상
서울시	[설자리]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청년문화예술인
	[놀자리]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청년일반 및 청년활동가
	[놀자리]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 무중력시대) 발굴 및 지원	청년일반 및 청년활동가
	[놀자리] 청년허브 운영	청년일반 및 청년활동가
대구	[청년예술가 글로벌 인재양성] 신진예술가 및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청년문화예술인
	[청년예술가 글로벌 인재양성]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청년문화예술인
	[청년예술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 레지던스 파견	청년문화예술인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청년예술창조공간 조성	청년문화예술인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청년문화거리 조성 (동대구로 등)	청년일반 및 청년문화예술인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청년축제 육성	청년문화기획자 및 청년일반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대구예술발전소 아트카페 운영	청년문화예술인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버스킹 공간 조성 및 운영	청년문화예술인 및 청년일반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부산	청년문화기획자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문화전문인력 지망자
	굿아이디어스-대학생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대학생
순천	청년 문화누리단 구성 및 운영	청년문화기획자 및 청년문화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청년문화기획자
	순천대학로 활성화 작업	청년일반
	청년 필독도서 지원	청년일반

* 자료: 김병권 외(2017), 부산광역시(2017)

- 주요 지자체 청년문화 정책의 성격은 크게 청년문화예술인 및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전문인력 양성, 동호회 육성)으로 정리됨.
- 서울시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청년허브'에서 청년모임활동 지원(청년참), 청년 프로젝트 지원(청년활), 청년 활동가를 위한 사무실 지원(미담이), 그리고 연구 공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대구시의 경우, 청년문화예술인 및 기획자 육성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문화기획자 및 예술인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청춘힙합페스티벌(2017.5월)'을 진행했고, 10월에는 '2017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임. 하지만 '지역청년축제 육성' 명목으로 축제 예산이 전체 예산의 41.6%나 잡혀, 전시행정으로 보여지거나 청년이 처해있는 현실과 요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바 있음(대구경실련, 2017).
- 순천시의 경우 청년에게 필독도서 구입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 중임.

4) 광주지역 청년 문화·여가 정책 개선방향

- 청년 문화·여가정책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청년 문화향유권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청년 문화인재 양성) △다양한 여가시설 지원 및 동호회 육성 지원(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로 이루어짐.
- 따라서 청년 문화·여가 정책의 쟁점은 △다양한 청년들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는 것 △청년문화예술인이 광주지역에서 육성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 △문화생활 및 생산 욕구가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정보 전달 및 지원이 될 것임.

□ 청년 문화 향유권 확대

- 광주지역 청년들이 문화·여가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인프라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부담(50.2%)과 시간 부족(27.8%) 등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이 문화 향유권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³⁾
- 광주 청년 계층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하면, 문화/체육 분야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은 △장애인 청년(37.5점) △가사 활동 중인 청년(54.55점) △취업준비 청년(58.04점)이었음.
- 2012년 1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과 도서·음반 등의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내의 문화소외계층⁴⁾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청년 중 문화 향유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함.
- ‘근로빈곤 청년 대상 문화바우처 지원’ 정책 수요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취업준비생(취업을 위한 전문사설학원 통학+정부기관 통학) △1인 가구 청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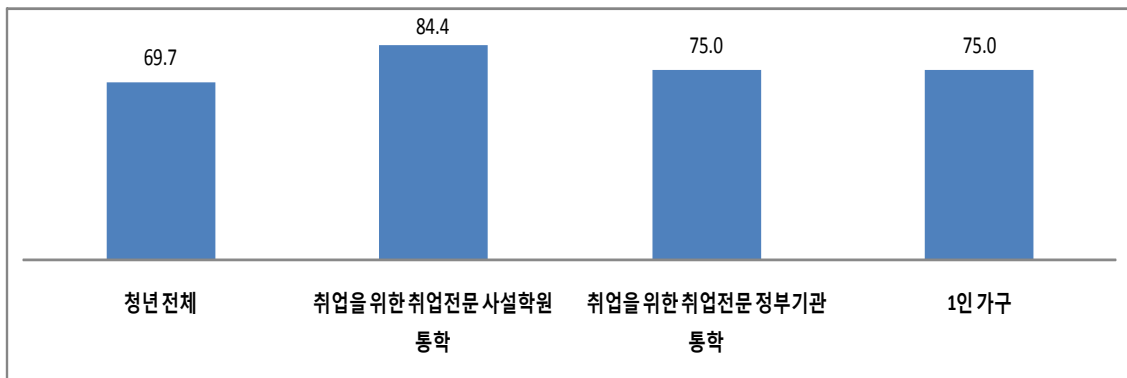
3) 광주지역 청년 취약성과 자립기반 연구(2016)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광주 청년 내에서 여가활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했음. 즉, 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격차가 발생했는데, 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여행이나 스포츠 등으로 여가생활을 누리나, 구직자는 여가활동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함.

4)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함(「광주광역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2조)

<표7> 광주지역 청년 유형별 문화/체육 만족도.평균 여가활동비

유형	청년 전체	장애여부		비경제활동 유형			
		예	아니오	육아	가사	취업준비	쉬었음
만족도 (100점 만점)	61.62	37.50	61.81	64.47	54.55	58.04	61.54
여가활동비 (만원)	3.4	3.83	3.39	3.06	2.48	2.75	2.88

[그림] 광주지역 청년 유형별 근로빈곤 청년 대상 문화바우처 지원 필요도



□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청년 문화인재 양성)

○ 청년 문화인재 양성은 공간 지원을 포함한 인재육성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두 축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정책 분야라고 볼 수 있음.

- 2017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문화정책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청년문화향유권 확대(53%)' > '청년문화인재양성(26.9%)' >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20.1%)'임.

○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문화향유권확대' 사업의 경우, 상설로 진행되는 광주버스킹을 제외하고 축제.페스티벌 성격을 지니고 있음. 축제.페스티벌의 비중을 줄이고 '문화 콘텐츠 개발'의 영역을 확장하여 지속적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광주지역 청년문화예술인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설적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강좌 등이 있을 것임.

<표8> 광주 청년 문화정책 예산 비중

	소관부서	계	예산 비중	국비
총계	10건	1,415	100.0%	50
1. 청년문화향유권확대	4건	750	53.0%	
광주버스킹 운영	문화예술진흥과	300	21.2%	
세계청년축제	청년정책과	300	21.2%	
광주 물총축제	관광진흥과	50	3.5%	
G-POP 페스티벌개최	문화예술진흥과	100	7.1%	
2. 청년문화인재양성	4건	380	26.9%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문화예술진흥과	130	9.2%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청년쿼터제	문화도시정책관실	100	7.1%	50
청년이 만드는 청춘대학 운영	청년정책과	50	3.5%	
청년 창의 콘텐츠 개발지원	청년정책과	100	7.1%	
3. 청년공간조성및활성화	2건	285	20.1%	
청년문화공간 교류활동 지원	청년정책과	100	7.1%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시립미술관	185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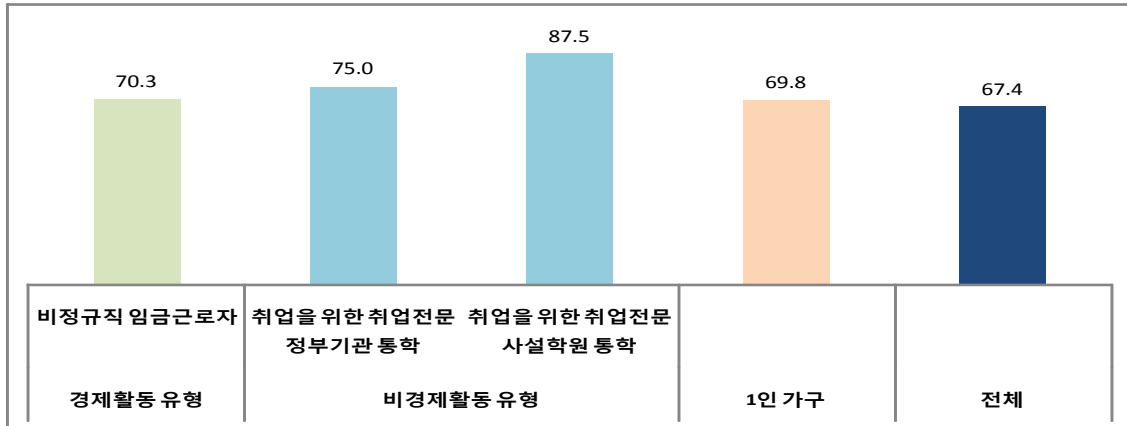
* 자료: 2017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2016)

- 또한, 광주지역 청년문화예술인 및 청년문화기획자들이 만들어나가는 축제·페스티벌의 경우 인건비 책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축제나 행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등 전 노동과정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구성해나가야 할 것임.

□ 청년공간 조성 및 활성화

- '문화'의 범위는 예술 활동이나 창작 활동 뿐 아니라 총체적인 삶 전반이라고 볼 수 있음.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일상 속 다양한 행위들을 포함하는 활동(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15)인 바, 청년들의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청년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취업준비생(취업을 위한 전문시설학원 통학+정부기관 통학) △비정규직 노동자였음.
- 청년활동가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간 마련과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기] 광주지역 청년 유형별 근로빈곤 청년 공간 지원 필요도 (단위: 점)



제2강좌

장애인과 문화도시 광주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장애인과 문화도시 광주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1. 장애인의 이해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6월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 9장 9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세부적 장애유형은 15개 유형으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장애와 내부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확대예상 장애 범주로는 만성 소화기(위 절제술 등)장애, 만성통증, 뇨장애, 각종 불치병 등으로 인한 장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애유형	등급(2019년 6월 30일까지)						2019년 7월 1일 이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장애인 등급제 폐지(욕구,환경·맞춤형S)		
지체장애	○	○	○	○	○	○	지체장애	중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뇌병변장애	○	○	○	○	○	○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	○	○	○	○	○	시각장애		
청각장애	X	○	○	○	○	○	청각장애		
언어장애	X	X	○	○	X	X	언어장애		
안면장애	X	○	○	○	○	X	안면장애		
신장장애	X	○	X	X	○	X	신장장애		
심장장애	○	○	○	X	○	X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	○	○	X	○	X	호흡기장애		
간장애	○	○	○	X	○	X	간장애		
·요루장애	X	○	○	X	○	X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X	○	X	○	○	X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	○	○	X	X	X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	X	X	X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	○	X	X	X	정신장애	X	

※ 광주광역시 장애인등록 현황 : 69,885명(2018.12월말 기준)

2. 장애인 문화예술의 현황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장애인인권헌장 등에 명시되어 있고, 이 지역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7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조례로 공포된 “광주광역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및 장애인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향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등 주요한 사항이 산적해 있음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실행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며 한국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보건복지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5년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설립에 따라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고와 복권기금이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와 함께 문화복지를 정책적으로 채택하였고 이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 복지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수준 높은 문화생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만큼 장애인을 포함하여 폭넓은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에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문화복지의 실현은 장애인복지가 지향하는 정상화의 실현에도 부합된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문화와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는 비장애인 못지않게 높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복지와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설을 정비하고, 또 필요하면 문화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합시설을 건립하며 공연 전시·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바래고 있다.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장애인들이 57.2%가 평소 여가와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임을 역설하는 주장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문화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96년을 문화복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문화를 국민복지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문화복지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제 제일

주의에 치중한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것으로 기대와 주목을 함께 받았다. 문화복지는 물질과 정신, 경제와 문화가 조화를 이룬 삶을 지향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의 물질적 경제적 위주의 복지 대신에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함께 배려한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의 실천이 지향하는 바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삶을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삶을 영위함으로써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즉 변화하는 시대에 새롭게 생겨나는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복지를 보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답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화복지가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의 지금보다 더욱 확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문화와 여가 생활에 대한 배려 역시 결코 소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이 법을 관리하는 부처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법과 제도에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에 관한 지원 내용을 통합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예술과 체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장애인문화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또는 협의제도의 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문화에 대한 권리는 보통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고, 다른 하나는 평균적인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할 때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도와주는 사회적 문화권리의 개념이다.

장애인문화 역시 장애인에게는 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본인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과 능동적 대처를 통해야 만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장애의 제거가 요구되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활동에 대한 기회와 폭이 점차 넓어져가고 있다.

문화는 바로 자기가치를 발현하고 자아성취를 이루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제는 문화생활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즐기고, 문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현하며, 자아성취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때의 문화생활이란 학습본능을 통해 습득된 놀이, 오락, 게임, 레저, 예술, 스포츠, 레포트 등의 여가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부분의 장애인은 문화생활에서 크게 소외되어 있으며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즉, 저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조건과 불리함으로 비롯된 장애인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적 존재 대상에서 상당기간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문화는 인간 삶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인류의 창조적 표현들과 경험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삶을 구가하되 좀 더 인간답게 살려는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생활(영역)의 권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요건과 도구가 된다.

UN에서 문화란 인간의 기본권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제약 없이 누구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1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등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창작활동 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동일하게 그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이 같은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UNESCO)의 세계문화보고서(World Culture Report)에서 “국가의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의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두면서 문화예술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 활동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장애인문화권리의 보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의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게 하고, 내재된 잠재력을 계발하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힘을 제공하며,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 나가게 해 준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문화권리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과 힘을 일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립생활과 역량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4.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제언

문화 복지의 지원은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 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 복지시설 등 광범위한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취약한 계층 유형을 구분하면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지리적 취약계층, 복합적 취약계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속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많기 때문에 장애인은 문화적으로 복합적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중 문화바우처, 사랑티켓, 찾아가는 문화순회, 문예회관 초대공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생활체육지원사업 등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행바우처, 체육바우처, 찾아가는 영화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 전문체육지원사업 등에서는 장애인의 만족도가 비장애인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의 지속성이 요구된다. 단발성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바꾸어야 하며, 꾸준한 지원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일정 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미비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문화예술활동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등에 관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여가 지원사업의 만족도 비교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설에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의 구비, 문화예술의 공연과 전시, 교육, 시설 등에 관한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로서만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경제적, 물질적 가치의 향유가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신적 가치의 향유와 보장이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가치의 향유와 보장에서 인간의 삶의 질에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화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권의 보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문화권 향유 보장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장애인이 문화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갖고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고, 나아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힘을 제공한다. 문화 활동에서 참여기회 확대는 심리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참여 및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재활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성취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문화권의 보장과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문화권을 향유하기에는 많은 장애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권 향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벽, 문화작품과 시설 및 정보 등에서의 접근의 장벽, 프로그램적인 장벽, 전달체계에서의 장벽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즉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적 차원, 지역사회적인 차원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고 배려가 요구된다.

제3강좌

오월여성과 문화도시 광주

정 현 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오월여성과 문화도시 광주

정 현 애(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1. 들어가는 말

도시의 발전 전략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주체별로 살펴보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광주라는 지역 안에서 비슷한 정체성을 지닌 주체를 상정할 때 인간의 한 시기를 지칭하는 청년,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장애인과 같은 의미로 지칭할 수 있는 '오월여성'을 비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여성을 지칭할 수도 있고, 오월항쟁의 관련자이거나 이후의 오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오월운동이나 기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오월여성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또 5·18역사의 발상지인 광주에 사는 모든 여성을 오월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는 광주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도시 발전전략으로 문화도시⁵⁾ 인권도시⁶⁾를 추진하면서 소외된 집단들의 인권향상 수준을 살펴보는 일로 생각된다. 5·18의 발상지인 광주에서 도시 발전 전략으로 추진되는 문화도시와 인권의 문제는 사회구성원에 실제 생활에서 5·18정신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오월은 광주의 모든 여성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주체로 참여했던 오월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은 5·18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일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역사의 주체'로서 소외되는 고통도 있다.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과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문화의 가장 큰 역할은 고통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여성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이 시간의 오월여성은 오월당시에

5) 박해광·김기곤, 2007. 지역혁신과 문화정치-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75.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상품화하는 도시발전전략과 동시에 삶의 질 제고, 쾌적성 추구,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 그리고 자부심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문화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6) 광주광역시는 2007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제정, 2010년 7월 '인권사무소'를 설치하였고, 2011년에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여 인권도시의 확산에 역할을 하였다. 2012년에는 '인권지수 및 인권형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출범시켰다. 2013년에는 제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여 '광주인권도시 원칙(Gwangju Guiding Principles for a Human Rights City)'을 채택하였으며 2013년 10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참여 했던 여성들과 여성가족, 5·18정신을 구현하는 지역 여성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후 추진되는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오월여성들을 비롯한 지역여성의 인권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2. 문화도시

지자체들이 스스로를 문화도시로 표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새로운 현상으로, 이것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편으로 문화는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으로서 문화산업을 대표하며, 문화상품이 경제학적으로 유효한 상품이라는 믿음, 그리고 문화산업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맥락을 통해 문화도시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높은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전망을 내포한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에 대한 기대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반영한다. 즉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상품화하는 도시발전전략과 동시에 삶의 질 제고, 쾌적성의 추구,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 그리고 자부심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문화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문화 도시의 근거) 문화 수도론과 아시아문화 중심론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5·18민중항쟁이다. 문화 수도론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유형적 문화유산이나 예술 또는 예술적 분위기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한정지어서는 안되고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정신사적 측면이나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철학적 안목들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인류사회와 교섭할 수 있는 가치부분이 거세되면 문화수도론 자체가 몰가치적 논의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하면 광주의 비중 있는 역사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워야 인류와 교류할 수 있는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술적 전통이 간과될 수 없듯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역사적 역할과 정신사적 고뇌를 함께 다루어야 문화수도 논의의 근거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동학농민전쟁, 한말 의병투쟁, 일제하 소작쟁의, 광주항일 학생운동, 그리고 80년 5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통 속에서 민족사회 전체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뇌를 거듭해온 곳이다. 전국적인 담론에서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이러한 정신사적 입장에 서야 문화 발신지로서의 광주를 부각시켜야 한다.⁷⁾

7) 정현애, 2003, 「광주문화수도론'의 방향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4대의회 정책토론회.

문화관광부가 제시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⁸⁾에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대상이 왜 광주인가라는 점을 광주의 지역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 "5·18 정신을 지니고 있는 광주는 아시아의 민주화 성지로 인식되어 있다. 민주·인권·평화 등의 정신적 가치와 함께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예술적 자산과 문화·인적자원이 풍부한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미래형 삶의 도시 광주 이미지로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1980년의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만들어낸 민주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이와 함께 긴장·경합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온 예향 이미지가 결합되어, 이들이 문화중심도시를 구성하는 주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화에 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문화란 '삶의 체계' 또는 '생활방식'이라는 인류학적 개념을 갖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문화도시란 '삶의 가치와 자기 존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상적 삶이 질적으로 제고된 도시를 지칭한다. 하지만 동시에 문화중심도시를 '미래형 문화도시', '새로운 유형의 문화산업도시', '문화교육 시범도시', '아시아 문화허브' 등의 수사로 표현되는, 결국은 개발주의적·경제주의적 모델로 제시한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전개과정)⁹⁾ : 국토의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문화적 차원의 지역발전 모델을 통해 해소시키려는 국토 균형발전차원

광주에서는 지역 발전 전략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며,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려는 방안으로 문화도시 만들기 작업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진다. 광주는 '빛과 문화의 도시'라는 구상을 수립, 추진하고 있었다. 그 근거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빛의 도시 광주 2020 보고서』,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질적 단초를 제공한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이 있다.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

국가정책담론으로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광주시는 사업의 성격을 지역 중심적 차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고, 지역 시민사회는 문화관광부와 광주시의 입장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문화도시를 끌고 가는 일종의 철학에 대한 합의의 부족, 문화컨텐츠 연구와 개발에 대해 단순한 경제개발로 여기는 이해의 부족도 나타났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출발점에서부터 다양한 세력 간의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8) 문화관광부, 2003,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9) 박해광·김기곤, 2007. 지역혁신과 문화정치-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① 아시아 문화 전당 설계안 변경과 랜드마크

갈등의 가시화는 문화전당 설계안 변경을 광주시에서 요구하면서부터였다. 예비 종합 계획이 발표 되자 광주시는 랜드마크 등이 약하다고 하면서 아시아 문화 전당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민주당시지부와 광주예총이 가세하였고, 정부안에는 5·18기념재단, 광주 YMCA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19 곳에서 찬성하였다. 진정한 랜드마크는 '보여지는 것'과 '느끼는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느끼는' 기능을 동시에 갖춘 공간이 되어야 함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갈등이라 할 수 있다.

② 상징공간을 둘러싼 갈등

5·18이 가장 중요한 사적지인 옛 전남 도청 공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도청 건물이 가진 상징성은 사실상 광주의 지역 정체성 담론의 형태인 '민주성지론'을 지탱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③ 문화수도와 문화중심도시

문화 수도에 대한 개념은 시민사회에서는 5·18의 역사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역소외와 국가균형 발전차원, 세계와의 소통입장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광주정신으로 세계와의 소통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타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며 문광부와 광주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⁰⁾ 국가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차원으로 수립하지만 타 지역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시아문화도시 개념을 제시하였다. 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국가정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갔지만, 경주역사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특별법을 둘러싼 지역 간 이해 다툼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광주문화 수도에 대한 타 지역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문화도시 정체성 갈등 - 의향론과 예향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가주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사업을 지역 내부로 제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화산업적 관점을 중시하며 물리적 공간 건조와 경제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광주를 지탱해온 과거의 지역 정체성은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의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정체성은 5·18인데, 이것은 자부심과 피해의식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 양면성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10) 앞의 글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그 한 태도는, 문화도시 광주는 5·18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향론은 인권도시 추진으로 이어졌다. 2011년 5·18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세계화되면서 의향론의 이미지가 커지고 있다. 우위다.

한 쪽에서는 문화도시광주는 5·18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한다. 예향론은 문화도시론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문화산업 도시 만들기를 지지하였다.

5·18은 광주를 대표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들과 경쟁관계에서 단연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비엔날레로 대표되는 '예향'으로써의 이미지와 민주도시인 '의향'으로써의 이미지가 점차 후자를 중심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¹¹⁾

⑤ CT 연구원

국가균형 발전차원에서 수립된 종합계획안에 수익모델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7대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계획 속에 문화와 산업을 서로 견인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발전이 관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가와 광주시에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문화 관련 사업'이면서도 그 정책 내용과 지향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5·18은 근거로만 사용하였고 그 정신을 직접 실현하는 데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문화도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 중의 하나인 CT 연구원도 지지부진하다. 그로 인한 갈등, 지연되는 사업은 기대와는 달리 도시의 주민, 주체들에게 기대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근래 민주도시로서 이미지가 커지면서 5·18을 직접 체험한 여성들의 현황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11) 정호기, 2000년, 「5·18과 도시공간의 상징적 구성」, 『공간과사회』 통권 제14호, 131쪽.

3. 오월여성

1. 항쟁기간 동안의 여성투쟁

- 5·18 민중항쟁에서 사회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권인 송백회, YWCA, 문화패 '광대', 들불야학, JOC를 중심으로 한 활동들은 대략 도청 수습위의 교체를 기점으로 크게 들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23일 이전으로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항쟁에 참여한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23일 이후로 YWCA를 거점으로 전개된 다양한 여성들의 힘이 집결되고 조직화·체계화되는 시기이다.
- **(녹두서점)** 녹두서점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수성은 항쟁 초기의 투쟁에서 거점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투쟁의 거점으로서 서점을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남편의 예비검속으로 녹두서점을 혼자 운영했던 정현애가 송백회의 회원이라는 점이다.
- **(송백회)** 송백회는 70년대 말 광주지역에서 탄생한 진보적 여성단체이다. 40~50명으로 구성된 송백회는 주로 민주화운동의 구속자 및 활동가 부인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에 동조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20~30대 전문직 여성들(간호사, 교사, 회사원, 사회단체 간사, 작가)과 여성노동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었다.
- **(송백회 활동)** 5·18 민중항쟁에서 송백회는 송백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면에서 나서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송백회를 매개로 해서 각기 다른 단체들이 결합·결집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5·18 민중항쟁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점에서 송백회의 영향력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송백회가 항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송백회의 조직이 상하위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옆으로 넓게 펼쳐진 수평적인 그물망 조직이라는 데 있다.
- **(화염병 제작)**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소식전달, 부상자치료, 식사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 활동만으로는 안된다는 의견이 모여져 화염병을 제작하게 된다. 화염병 제작은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시작하였지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여성들이 병, 휘발유, 성냥 등을 구입하여 오고, 녹두서점 뒷방에서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화염병은 문화방송국의 광주소식 왜곡 보도에 분개, 항의하는 시위에 사용된다. 또한 20일 오전에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이 녹두서점에 와서 맨손으로 공수부대의 총칼에 맞설 수만은 없다면서 화염병을 대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 **(궤기대회)** 시민궤기대회는 처음 도청 앞에서 도청 수습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시작되었는데 수습위원들이 항복하자는 말을 했다가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 때부터 운동권이 대중집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각성이 싹트면서 문화팀 광대가 시민궤기대회를 주도하고 작업은 YWCA와 녹두서점을 오가며 이루어진다.

▪ **(여성들의 활동거점, YWCA)** 22일부터 그동안 개별적으로 가두시위에 참여해오던 임영희, 홍희윤, 이윤정, 정유아, 광대 여자단원 김정희, 고미영, 최인선, 김영희 등 수십 명의 여성들이 녹두서점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일의 규모가 커지자 23일 밤 송백회 회원이면서 YWCA 간사인 정유아와 이윤정의 도움으로 YWCA로 장소를 옮겨 궤기대회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YWCA 조아라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 사용을 허가하자 25일부터 YWCA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활동들이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된다.

▪ **(YWCA 활동)** YWCA에서의 활동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시간상으로 항쟁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서 쌓아둔 노하우도 있고 YWCA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모두 모여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진행을 좀더 유연하게 하였을 것이다. YWCA에서의 활동은 선전·홍보조, 모금조, 리본조, 대자보조, 식사조 등으로 분담되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은 일반여성시민과 송백회, 극단 광대의 여성회원들,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다.

▪ **(조직적인 취사활동)** 시민군을 위한 도청에서의 취사활동은 여·중고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5일 김창길 위원장의 사퇴로 JOC 여성노동자 10명을 중심으로 13명이 2교대로 팀을 짜서 26일까지 취사활동을 담당하였다. 취사조에는 대부분이 JOC 회원인 여성노동자들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취사조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함께 참여하였다.

▪ **(선전활동)** 언론과 방송이 광주의 진상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지하유인물, 가두방송, 궤기대회로 대별되는 선전활동은 극단 광대단원들과 들불야학·송백회 구성원들이 18일부터 각각 제작 배포했던 지하유인물을 22일 투사회보로 일원화된다. 투사회보 제작팀은 문안작성, 필경 등사, 물자조달,

배포조로 편성하여 조직적 체계를 갖추면서 그 내용도 사실의 폭로뿐 아니라 적들의 실체, 투쟁대상, 행동지침까지 담아내게 하였다. 투사회보 뿐만 아니라 모든 선전활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기획조, 꺠기대회조, 가두방송조, 대자보조, 인쇄조 등으로 역할분담을 한다.

- **(모금활동)** 홍보활동이나 취사, 꺠기대회 준비 등에 소요된 돈은 처음에는 송백회에 있었던 기존의 회비와 개인 돈으로 충당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금해 온 것으로 충당하였다. 모금운동은 도청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주로 YWCA에 있던 송백회 회원을 비롯한 여성들이 담당하였고 나이 어린 여고생들도 자발적으로 도왔다. 또한 송백회 회원들은 리본을 만드는 일을 담당해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 **(차량시위)** 20일 민주기사들의 봉기를 매개로 차량시위가 등장하자 여중고생과 여성노동자들이 시위차량에 탑승하여 무기접수를 위해 전남지역 일원을 원정하는데 참여하였다. 또한 무장의 필요성을 느낀 여성들은 25일경 도청 안에서 총기사용법과 수류탄 투척법을 훈련받는 적극성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21일부터 25일까지 일신방직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근무복 차림으로 차량시위에 합세하였다. 이들 여성노동자들은 대형버스에 집단적으로 탑승하여 김대중석방,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 **(물품 제공)** 시민들은 18일 오후부터 희생을 무릅쓰고 시위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건네면서 격려하였다. 이러한 물적 제공은 공수부대의 잔악한 만행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위기의식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러한 후방지원활동에는 남녀가 따로 없었지만 대부분 여성들,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이러한 물적 지원은 각 시장 노점상 아주머니들과 주부들을 중심으로 동별 단위로 확산되었다.
- **(헌혈)** 여학생들은 스스로의 독서나 혹은 교내 씨클활동을 통한 선후배와의 토론으로 학교교육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고등학생들의 높은 사회비판 의식은 19일 중앙여고, 광산여고 학생들의 집단적 가두시위 기도와 헌혈활동, 취사활동 같은 항쟁에의 참여를 통해서 드러났다.

- **(선동선전활동)** 여성 선동가들은 남성들의 차량돌진과 무장투쟁과 같은 선동방법과는 달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내용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러한 선동선전활동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하게 항쟁 기간 내내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 **(시체처리)** 가두방송 이외에도 항쟁 기간 동안 여성들이 보여준 투쟁활동은 시위참여, 헌혈활동, 도청에서의 대민업무, 시체처리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 **(결사 항전)** 27일 도청에서 새벽방송을 통해 알리고 시민들의 결집을 호소하였다.

2. 5·18 민중항쟁 이후 여성활동

- **(5·18 교육과 모금활동)** 원풍모방의 부지부장이었던 박순희는 5·18 민중항쟁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의 결과로 모아진 돈을 광주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5·18 민중항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이 일로 구속되었다. 또한 청주산업선교원 활동을 하였던 조순형은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 소식을 타이프해서 등사기로 밀어 배포하였다.
- **(수배자·구속자 뒷바라지)** 항쟁 직후 발생한 수많은 구속자와 수배자들의 뒷바라지는 여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송백희의 경우 창립 취지가 구속자들의 옥바라지였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항쟁 이후 수많은 구속자와 수배자들의 발생은 송백희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였다.
- **(구속자 가족회)** 5·18 민중항쟁 직후였던 1980년대 초반, 항쟁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구속자 가족회와 유가족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18 민중항쟁 이후 저항운동은 항쟁의 직접 피해자인 유가족과 구속자의 가족에 의해 제일 먼저 추동되었다. 구속자 가족들은 '구속자 가족회'를 결성하고 조직화하여 구속자 석방과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활동)** '구속자 가족회'는 항쟁 직후 재판 중인 전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주로 구속자 석방운동, 사형수 구명운동, 5·18 민주항쟁 진상 알리기 등을 중심으로 '전두환 광주방문 저지운동', 대법원 사형확정 판결시의 '김수환 추기경 사무실 농성', 1심 재판 당시의 '법적 저항운동' 등을 격렬하게 전개해 나갔다. 1982년 12월 5·18 민주항쟁 관련 구속자가 모두 석방된 후에도 다른 구속자 가족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85년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로 계승되었다.

- **(5월여성제)** 광주전남여성회는 창립된 첫 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5월 여성대회 및 전국여성 5·18 묘역 참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5월 여성제'가 매년 5월 18일을 전후로 해서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다.

- **(오월여성단체)** 2001년 '오월여성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2006년 '오월어머니회'로 개칭하고, '(사)오월어머니집'을 결성하였다. 2017년 '오월어머니회'와 '(사)오월어머니집'을 통합하여 (사)오월어머니집으로 통합하였다. '오월어머니상' 시상과 '주먹밥 나눔'사업을 하고 있다. 오월민주여성회는 2007년 결성하여 5·18민주항쟁의 민주정신과 여성들이 실천했던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켜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 자주적·평화적 민족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문화 활동

- . 기록, 학술연구, 영화, 사진전, 등 다양
- . 오월여성제¹²⁾에는 오월여성단체를 비롯한 지역 진보적인 운동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88년 광주전남여성회를 중심으로 5월 여성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대회는 주로 오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518민중항쟁에 있어 여성의 역할 재조명 등 여성의 시각으로 5월을 규명하는데 비중을 두었고 오월여성연구모임을 통해 광주민중항쟁과 여성활동 등에 관한 학술 활동과 항쟁의 여성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술 채록 등을 진행하였다.

- 90년대 초반 광주전남여성문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월여성제가 시도되었다. 오월정신계승과 함께 성폭력문제의 공론화, 오월 여성상제정 등이 진행되었다.

- 2000년대 후반 들어 여성운동은 다시 오월과 여성운동의 관계성의 문제, 오월 정신을 어디로부터 전수받고 계승해야 할 것인지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고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 2007년 전국의 여성활동가들과 함께 한 오월 워크숍, 2008년은 지역 여성계로 확대하였다. 여성계 합동 분향을 추진하였고 오월여성제 복원을 위한 오월여성제추진위원회가 구성하였다.

- 2009년 소박한 오월여성제를 진행하고 광주여성희망포럼과 오월여성제추진위원회, 여성단체연합이 공동으로 80년대 광주지역 여성운동사를 정리한 다큐 '5월로부터 시작하는 광주여성이야기' 제작과 오월 구술사 채록집인 '필녀필녀들의 오월 이야기'를 출판하였다.

- 세대간, 성별간의 소통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 . 오월여성길¹³⁾은 광주 YWCA 옛터- 광주 MBC 옛터-녹두서점 옛터-금남로 일대 옛 전남도청-5.18민주광장 - 상무관 등이다.

12) 황정아. 2010. 「518과 광주 여성운동(2차 토론)」. 『오늘날 5.18은 무엇인가?-5.18 30주년, 새로운 지평을 위한 시민강좌와 토론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25-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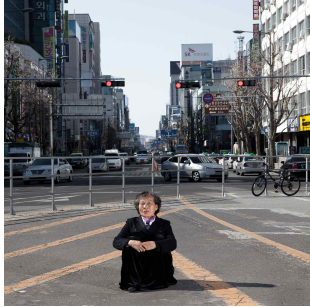



13) 광주 '오월을 걷자'

3. 여성 상황

▪ 지속되는 트라우마

극복되지 못한 상처, 경제적 어려움,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5·18의 진실 등으로 많은 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 속에 있다. 참여자와 사망, 구속, 부상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표 1) 사망, 구속, 부상 가족들¹⁴⁾

	
<p>박 순 금</p>	<p>임 근 단</p>
	
<p>최 정 아</p>	<p>박 유 덕</p>

14) 김은주,

▪ 새롭게 부각되는 성폭력 피해

언론에 10여건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스스로 증언한 사례와 병원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¹⁵⁾

2018년 국가인권위, 국방부, 여가부등이 공동조사단을 꾸려 상담·접수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 자료 45건 등을 발견하여 분류한 결과 성폭행 피해내용 총 12건과 이외 연행 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33건의 여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15) 언론에 보도된 5·18 성폭력 피해 진술

연번	피해자	피해 상황		비고
1	○○○ (60세) (당시 전남대 음 악교육과 4학년)	1980.7.3.	당시 안내방송을 하였고 교생실습 중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옛 광주 상무대 영창에 연행됨, “얼굴이 반반하 네” 데모 안하게 생긴년이, 너 이년 인자 무기징역이다 ”라는 말을 들음	
		1980.9.4.	소령 수사관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비빔밥 한 그릇을 사준 뒤, 대낮에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 함	
		1980.9.5.	기소유예	
2	전○○	1980.5.19	동사무소에서 앰프를 가지고 나와 가두방송을 하였음.	
		1980.5.24.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505보안대로 끌려가 몇 몇은 총을 피해자의 귀와 허리에 대고 있었고, 수사관은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막 때리며 “니가 처녀냐”고 함	
3	한○○ (가명)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음 당시 함께 있었던 가정주부도 당했음	
4	○○○ (사고 당시 여고생)	1980.5.19.	걸어서 귀가하던 중 공수부대 군인 5명에게 성폭행을 당함	
		1987.	3개월간 나주 정신병원에 입원 현재 승려	
5	성명불상		MBC 옆 목욕탕에 끌려가서 성폭행 당함. 다른 여자 3 명도 성폭행 당했다고 함, 80년대 중반 전 YWCA에 신 고했다고 함	
6	차○○		505보안부대와 상무대 영창을 거치며 성고문 가혹행위 를 당했다고 함	
7	오○○ (가명) (사고당시 고3)	1980.5.19.~5.20.	분신자살 딸의 행동이 이상해 같이 잠을 자면서 무슨 일이 있었 냐고 하니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처녀막 을 원상회복 할 수 있냐고 물어봐 운동을 심하게 하면 처녀막이 터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8	권○○ (사고 당시 고2)	1980.5.19.~5.20.	정신과 치료	
9	최○○ (가명)	1980.5.19.~5.20.	군용 화물차 2대가 와서 군인들이 내려 총을 대면서 차에 타라고 했다. 아줌마들이나 나나 울면서 내려 달 라고 사정했는데 총을 들이대면서 산속으로 데려갔다. 우리가 반항하자 발로 머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해 울면서 당했다. 계엄군의 복장은 얼룩무늬였 다.	
10	임○○ (가명) (당시 22살)	1980.5.22.	새벽기도를 가다가 군인에게 끌려간 뒤 몇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음,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던 피해자는 이후 가축을 반복. 대구 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적도 있 음. 유독 남성을 무서워 했음. 지금도 정신병동에서 입 원치료.	

표 2) 5.18여성 피해자 상황

종 류	내 용	비 고
피해기간	1980년 5월	
피해자	대부분 생존(50-60대 추정)	
가해자	군인	
피해 형태	성고문(시위자, 연행자)가능성 성폭행(일반여성) 신체훼손(시위자 등)	
피해증언	일부 실명 증언 향후 피해자 증언 가능성이 있음	
가해증언	없음	
사회적 관심	극히 미미 정치권, 5·18단체 및 시민단체의 관심 필요	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
구체적 증거	정황증거 군 내부문서에서 확인 가능	진상규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후속 조치의 필요**

국방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으나 이후 정확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과 대책 수립, 국가수준의 치유대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형성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대책이 필요하다.

4. 나오는 말

5·18을 근거로 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그 정신을 구현하는 고민과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립 아시안 문화전당과 CT연구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 미래에 대한 기대도 흐려지고 있다.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치관의 확립이 중요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오월여성의 대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오월여성제는 문화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18 정신의 구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다시 5월의 현장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 오월여성제를 새롭게 진행해나간다. 2000년대 후반, 여성의 피해 상황이 부각되면서 5·18진실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오월여성을 통해 살펴본다면 광주의 지속적인 문화도시 발전은 문화적 활동에 진실과 철학, 지역정체성 확립,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등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소통과 연대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 . 김은주, 2011,《오월어머니 초대전》.
- . 박구용, 2007, 「민주. 인권 그리고 광주정신」,『민주주의와 인권』,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 박해광·김기곤, 2007, 「지역혁신과 문화정치-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 . 오미란·안진, 2016,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사회운동사-여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 정현애, 2003, 「광주문화수도론'의 방향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4대의회 정책토론회.
- . 문화관광부, 2003,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장소마케팅연구센터, 2013, 『오월길』.
- . 정호기, 2000년, 「5·18과 도시공간의 상징적 구성」,『공간과사회』 통권 제 14호.
- . 황정아, 2010,「518과 광주 여성운동(2차 토론)」,『오늘날 5.18은 무엇인가?- 5.18 30주년, 새로운 지평을 위한 시민강좌와 토론회-』,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제4강좌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

신 경 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문화도시 광주 그리고 인권

신 경 구(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 광주의 특성은 무엇인가?

문화는 공연예술이나 전시물을 향유하는 것으로 보통 말하는데,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향유하도록 하는 환경,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¹⁾ 여기에 근거해서 문화 도시 광주를 분석해 본다.

첫째, 광주는 문화도시의 풍부한 환경을 갖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5대 비엔날레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큰 세계적 규모의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문화 시설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 봐도 전통 서화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로, 광주가 가진 최고의 문화도시 자산은 저항정신인데, 이는 저항정신이 없는 곳에서 창의성이 피어나지 못 하고, 창의성이 없는 문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에 항거한 광주학생운동과 오월민주화운동은 이러한 저항정신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정신은 뛰어난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다. 광주태생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광주의 영향 아래 성장해서 예술가적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에 광주가 배출한 예술가라고 말해도 좋은 사람들 역시 많이 있다. 한국영화를 현재의 반열에 올리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은 임권택 감독, 작가로 태백산맥 등 장편 소설로 우리 문학의 지평을 바꾼 조정래로 이 지역 출신이다. 최근 번역 문학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맨부커 상을 받은 한강은 어린 시절에 겪은 오월항쟁의 고뇌를 소설로 창조해 냈다.²⁾ 광주는 문화도시로서 남다른 특징이 많다.

셋째로, 광주에서는 오랫동안 문화전당, 광주영상복합문화관, 광주비엔날레관, 광주 폴리, 등 문화 관련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있다. 2019년 현재도 광주시의 문화예술분야 투자는 전국대도시 중 울산(3.1%) 다음으로 높은 2.9%이며, 문화예술공연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1) 세기동: https://www.huffpost.com/entry/a-brief-history-of-sustai_b_12787800

2)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를 배출한 것이 꼭 광주만은 아니다. 통영은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이상을 배출했고 토지의 작가 박경리를 배출했다. 이 두 사람 역시 저항정신으로 가득 찬 예술가임이 특징이다.

● 문화도시의 한계를 인권으로 극복

1. 환경

광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 환경이 있으나, 한산한 예술의 거리와, 규모에 비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문화전당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문화시설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또한 아파트 비율이 2017년 현재 73.7%로 대도시 기준으로 전국 최상위이다. 무등산도 고층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다. 지금도 개발업자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도심에서 주택을 밀어내고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은 도시 안에 공동체가 사라지고 볼거리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문화가 축소되는 동시에 기존 주민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공동체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 문화는 관계에서 창조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관계가 파편화된다. 주택조합으로 주민을 강제로 몰아내는 행위는 반 인권적이면서 동시에 풍부한 문화적 상상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다.

5·18의 미래는 광주가 소득 경쟁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광주는 아파트 비율이 77.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1.766으로 역시 전국 최고이다. 열대야는 2007년 14일에서 2016년 31일로 올랐다. 반면 대구는 2007년 20일에서 2016년 32일로 올라서 광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여성 시의원 비율이 전국 1위로 남녀 평등지수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전국 1위를 하는 등 인권이 존중받는 시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친환경 및 안전한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 늦었지만, 아파트 개발을 억제하는 조치와 함께, 시민들의 공유 공간을 확대하고, 쾌적한 분위기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운동이 여성, 노인, 어린이, 교육, 문화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다루기 힘든 주거권, 범죄 예방 등 생활 밀착형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친인권적인 환경이 되어야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2. 사람

광주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문화행사는 광주의 특성인 “인권도시”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프린지 행사는 시끄러운 음악과 음식잔치로 시작해서 시끄러움과 음식으로 끝난다. 이러한 행사에 참석자들이 단순 구경꾼과 소비자로서 뿐 아니라, 대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부족하다.

과거에는 우수한 문화예술인을 만들어 냈으나, 현재는 다른 모든 지방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문화 인력을 생산해 내지 못 하고 있다. 문화전당의 거주 예술인 초청 사업이 공간 제공만이 아니라, 우수 예술인을 만나러 오는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징적 인물을 키우거나 유치하는데에 투자해야 한다.

문화전당과 같은 조직에 행정 및 문화전문가들이 많이 근무해야 한다. 몇 년 전 문화전당 초기부터 일하던 직원이 해고당한 일이 있다. 행정과 문화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문화도시가 발전한다.

3. 경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규모투자가 계속되는 반면, 경제적 부가가치에서는 문화도시 광주가 가진 분명한 한계로 보인다. 음악가와 미술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문화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환경을 광주 경제가 뒷받침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빈약한 경제 기반 때문에 안정된 예술가로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교직에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 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화가가 그림을 팔거나, 음악가가 연주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물론이고, 충장 축제, 프린지페스티벌, 아시아문화포럼, 세계음악페스티벌 등, 대부분의 문화행사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유지하기 보다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광주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행사들이 영세적이거나 투자대비 부가가치가 낮다. 문화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13년이 지난 아시아문화포럼은 국제행사로서 자리매김을 못 하고 있다. 광주의 국제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행사 주관기구가 있어야 하고 또 인권도시 광주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가 가진 국제행사로 가장 대중적 동원력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사는 518주간 행사이다, 2006년에 시작한 아시아 문화포럼은 아직도 국내외에서 관심을 끌지 못 하고 있지만, 2011년에 시작한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작할 때보다 양적으로 10배 이상 성장했고, 2019년 현재 외국인 참가자 숫자만으로도 300명이 넘는 국내외에서 주목 받는 행사로 발전했다. 이는 광주의 특성을 잘 살린 행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518 행사 역시 전국화 및 국제화를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수준과 확장성을 높이면, 세계인권도시포럼 이상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 도시의 최고봉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인권도시이다. 현재는 광주의 학교폭력이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권도시 광주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 한다. 학교교육이 인권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서 학교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 갖가지 방법으로 광주의 크고 작은 범죄를 줄여서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야 인권 도시로 발전하고 또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제5강좌

성소수자와 인권도시 광주

백 희 정
(광주나비 대표)

성소수자와 인권도시 광주

백 희 정(광주나비 대표)

1. 들어가며

성소수자(性少數者, 영어: sexual minority)는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애자, 남성애자, 양성애자와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비성소수자인 이성애자 시스젠더 여성 또는 남성과는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적체성, 성별 등을 지닌 사회적 소수자들을 말한다. 성소수자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워낙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와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하위 집단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와 신조어들이 존재한다.

LGBT는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함께 일컬어 부르는 단어이다. 성소수자 운동에서 가장 주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나, 수용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소수자 권리 운동 초기에는 레즈비언과 게이만 일컫는 레즈비게이(Lesbigay)로, 거기에 양성애자도 더한 LGB로 불리었으나, 90년대 이후 트랜스젠더도 포함된 LGBT가 되었다.

퀴어(Queer)는 원래 "이상한", "색다른" 등을 나타내는 말이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명칭으로 쓰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성소수자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위키백과)

○ 성소수자(퀴어)란 무엇인가?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성이나 성적체성에 있어 사회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을 칭하는 단어이다. 우리 사회는 자신과 다른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고, 태어날 때 정해진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성소수자라고 부른다. 한편 '퀴어(Queer)'라는 단어는 본래 '기묘한', '괴상한'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를 따서 성소수자들을 괴상한 사람들이라고 낮추어 부르기 시작했는데, 역으로 성소수자들이 이 단어를 자신들을 칭하는 단어로 스스로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전복시켜 이제는 성소수자 전체를 묶어 이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 성적 지향성 VS.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은 자신이 어떠한 성별에 끌리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성적 지향이 같은 성별에만 향해 있다면 (즉,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만 끌림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동성애자일 것이다. 다른 성별에게만 끌림을 느낀다면 이성애자, 둘 이상의 성별에게 끌린다면 양성애자, 모든 성별에게 끌린다면 범성애자, 그 어떤 성별에도 끌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성애자라고 불리는 식이다.

이와 달리 성정체성은 자신을 어떤 성별로 여기는지에 관계되어 있다. 주로 태어날 때의 외관으로 정해진 지정성별과 자신이 정하는 성별인 젠더(Gender)의 일치와 불일치를 따지는데, 일치하면 시스젠더(Cisgender), 불일치하면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불린다. (접두사 'Cis-'는 '같은 쪽', 'Trans-'는 '다른 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비록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 끌림을 느끼며 다른 성별이라고 스스로를 여기지만, 우리는 각각 모두 하나의 인격체이다.

그렇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 당사자에게 절망적일 정도이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에이즈 등 질병의 원인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출처 : 오마이뉴스)

* 트랜스젠더

출생 시 지정된 자신의 성별에 큰 불편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이들과 달리 지정된 성별에 따른 외모와 옷차림, 성역할, 신체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나아가 지정 성별과는 반대의 성별 또는 남·여가 아닌 독자적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트랜스젠더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트랜스젠더에 관한 가장 큰 오해는 트랜스젠더가 모두 수술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바꾸었거나 바꾸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생식기 관련 수술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 트랜스젠더 중에는 수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전환한 사람도 있고, 수술이 아닌 호르몬 등 몇 가지 의료적 조치만을 받은 사람도 있으며, 별도의 의료적 조치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

○ 동성애

동성애는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의 감정과 성적 친밀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애는 이성애나 양성애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수행해 온 섹슈얼리티의 한 형태다.

이성애자, 양성애자, 동성애자 등 성적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생애 경로에서 성적 지향성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랑, 성적 욕망, 판타지 등에 대해 매우 확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나 이성애자인 사람이 평생 이성애만 실천한다는 전제 모두 인간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지하고 획득하는 다양한 과정을 포괄하지 못한다.

일부에선 동성애가 서구에서 '수입된' 퇴폐적 성적 행위라고 비판하지만, 전 세계에서 수집된 인류학적 보고를 보면 동성애는 인류가 존재한 이후 현재까지 모든 곳에서 나타난 유구하고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몸바사나 케냐 지역의 부유한 무슬림 여성들, 호주 원주민 사회에서 여자 사촌들 간의 성적 관계, 19세기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유행하던 '보스턴 결혼'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레즈비언 전통에 있음을 확인해준다. 중국의 경우 '동지'라 불리는 남성 게이들의 오랜 역사가 있고, 한국에서도 '수동무', '맞동무' 등 동성애 남성을 일컫는 용어가 사용됐다.

○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벽장에서 나온다'라는 말이다. 벽장은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을 숨긴 채 살아야 하는 시간과 공간을 뜻하며, 커밍아웃은 그 답답한 곳의 문을 열고 나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성소수자가 성적 지향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성적 지향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갖는 경우,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커밍아웃을 많이 할수록 성소수자의 우울 정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사회적 지지는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인 안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성소수자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이성애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성소수자인 상대에게 실망했다는 식의 발언, 성소수자 정체성이 확실한지 거듭 묻는 태도, 동성애 정체성을 고칠 수 있다는 식의 자세는 커밍아웃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지금 나에게 말해주어서 고맙다(혹은 기쁘다)',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등의 반응이 적절하다. 반대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서 살았어’, ‘나한테 진작 말하지’ 등의 반응은 당사자에게 죄의식이나 부끄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자녀가 커밍아웃하면 ‘우리에게 말해 주어서 고맙다. 우리는 널 사랑하니까 네가 성소수자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엄마 아빠에게 감추느라고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이 용기를 주는 부모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동성애는 질병인가?

43년 전인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지난 40년 동안 의학, 심리학, 사회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제의 연구 결과로 축적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반동성애 운동 단체에서 ‘동성애는 질병’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세계정신의학회’가 2016년 3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다시 발표했다.

○ 동성애 혐오도 권리라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를 포용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여기며 적대시하는 태도를 흔히 ‘호모포비아’, 다른 말로 동성애 혐오 또는 동성애 공포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혐오는 흔히 동성애를 성 중독, 소아 성범죄 또는 소위 ‘증북’과 연관지어 부르는 형태로 표출된다. 동성애라는 개념이 ‘더러운’, ‘항문’, ‘수간’ 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종류의 단어를 동성애와 엮어서 표현하면 성소수자와 교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공포를 품게 한다. 말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며 동성애자들을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며 심각한 차별이자 폭력이다. 결국 ‘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의 존엄성, 평등, 민주주의, 평화 등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다. 인간을 혐오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듯, 바로 그 이유로 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퀴어축제

“그들만의 명절”에서 ‘모두의 축제’로



(출처: 한겨레신문)

퀴어축제는 19년 전인 2000년 8월26일 종로구 대학로에서 70여명이 “크게 외쳐라 ‘나는 동성애자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행진하며 처음 시작됐다. 그사이 지난해에는 6만여명이 참가하는 대형 행사가 됐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사회에서 ‘없는 존재’처럼 지내는 성소수자를 불러 모으는 것에 집중해야 했다. 이런 분위기는 축제 슬로건에서도 드러난다. 1회에서 4회까지는 “크게 외쳐라”(2000), “한 걸음만 나와봐”(2001), “멈추지 마, 지금부터야”(2002), “움직여!”(2003) 등 존재를 드러내자고 제안하는 문구가 중심이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퀴어 절정”(2005), “위풍당당 퀴어행복”(2006), “This is Queer!”(이게 퀴어야, 2007)처럼 세상 밖으로 나온 당사자들에게 당당하게 축제를 만끽하자는 내용들로 나아갔다.

20년간 퀴어 축제의 흐름을 보면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가 보인다. 법무부가 성소수자를 법 적용 대상에서 빼버린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2007년과 이듬해엔 ‘작렬! 퀴어 스캔들’이란 구호를 내세웠다. ‘문제적 사건’을 뜻하는 영단어 스캔들을 넣어 “퀴어가 정말 문제인지 되물어보자”는 화두를 역으로 던진 것이다. 2010년부터는 더이상 ‘아우팅’(본인 의지가 아닌 타자에 의해 성소수자임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행진을 할 때 참가자들이 촬영을 거부하며 머리에 두르던 ‘빨간 띠’ 제도를 없앴다. 그동안 ‘아우팅’은 성소수자들에게 공포의 단어였기에 상당히 모험적인 일이었다. 2012년엔 ‘퀴어연가[가족:연을 맺다]’라고 슬로건을 짓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했다.

2019년 20회를 맞은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은 ‘스무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이다. 해마다 어려운 여건에서 도전하며 개최해온 축제가 지금의 성과를 뛰어넘어 더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다.

2000년 10명 규모였던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도 2015년 40여명을 넘어서 올해는 48명이 축제를 꾸리고 있다. 퀴어 축제는 지역적으로도 서울을 넘어 2009년 대구, 2017년 부산과 제주, 2018년 광주·인천·전주, 올해 경남 등 전국 8개 도시로 퍼져 나갔다.

3. 우리 주변의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뉴스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오른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5월 17일 ‘세종 맘과의 간담회’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퀴어 축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황 대표는 “퀴어 축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 현장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결과를 사진으로 보며 느낀 게... (중략) 정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축제들이 벌써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동성애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는 존재 그 자체이며 제3자가 찬성 또는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 지난 16일 민주당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퀴어퍼레이드(퀴퍼) 참여단’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참여할 당원을 모집했다. 참여단의 김민석 민주당 서울대지부장은 “당내 중도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 이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20대 청년 당원들 중엔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당 안에 성소수자도 있고 ‘엘라이’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30여명의 민주당 당원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차라리 ‘퀴어당’으로 커밍아웃하라”고 공격했지만 참여단은 즉각 성명을 내 “한국당은 ‘반민주혐오선동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반박했다.”

그간 성소수자 또는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금기시돼왔다.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 녹색당 등만 소수자위원회를 갖추고 퀴어축제에 공식 참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지만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퀴어축제에 참가했다가 동성애 반대세력으로부터 막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고 소수자 보호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우리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성소수자, 퀴어축제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저는 성범죄자가 아닌 군인입니다”(2017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으로 입건된 23명은 모두 합의 하에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수사 받았다. 현재까지 진급 누락, 보직 차별, 상시적 아우팅 위협, 생활고,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성애자 군인과 동성애자 군인은 따로 없다”며 “대법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근거는 군형법 92조6항은 군형법 추행죄로 군대 내에서 이뤄진 동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피해자 중심으로 헌법 소원중이지만 현재 판결은 미정이다.

이후에도 2018년 말부터 해군 3명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과 유죄 판결이 있는 지 2년 만이다. 성소수자 군인 A는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아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 상담관은 이를 소속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고, 곧이어 수사가 시작됐다. 상담하러 간 사람이 졸지에 범죄 혐의자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으나 인권단체의 항의가 들어오자 “반인권적 수사 절차”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합정 수사 등이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분명히 반대했다.

4. 다른 나라의 성소수자 인권 사례

- 영화 '런던 프라이드'

'성소수자 마크는 장기 파업 중인 광부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분개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동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 적도 없었고, 광부 파업과 성소수자들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당장 우리들의 투쟁을 해 나가기에도 벅찬 상황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어렵사리 큰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받을 사람이 없다. 마크와 친구들은 전화번호부를 뒤져 가며 탄광노조에 전화를 걸지만 "저희는 광부들을 지지하는 성소수자 모임입니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전화를 끊는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로 인해 이들과 엮이기 싫은 탓이다.'



* 런던프라이드

런던의 게이 프라이드에 참여하며 약 2 만 명의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행진

5. 광주 인권의 현주소

1) 광주인권현장

()

우리 광주 시민은 동학 농민 혁명, 3·1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실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광주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창조적 문화 시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광주 시민은 이 헌장을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시장과 시민 대표는 모든 시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광주시의 의무와 의지를 천명한 광주인권헌장을 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하여 엄숙하게 선포한다.

(본문)

제12조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는 시민이 고유한 문화 및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광주의 한 시민이 광주 학생인권조례 성적(性的)지향 조항이 무효라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했다.(2017)

광주시교육청은 2012년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 조건, 경제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조례 중 성적지향 조항이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여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6. 나가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시급하다. 2013년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스스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입법기관의 무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고 종교에 기반한 성소수자 혐오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이 모든 차별을 해소하지는 않겠지만 차별금지법은 인권기본법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권고를 받은 만큼 이미 제정되었어야 했다. 인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르다는 이유가 정상이라는 사회적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권기본법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하지 말라는 당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보이는 차별, 충분히 상상이 가는 차별은 없었을지 몰라도 침묵을 강요받는 보이지 않은 삶이 곧 차별이라는 인식 속에 살아온 성소수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곧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된다.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작은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질문해본다.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축복받는 반면 다른 76개 나라에서는 불법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에서 예부터 존재해 왔지만 여전히 어떤 곳에서는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9 생통강좌(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9. 9. 27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9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